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까지 인상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5920만원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의결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中企 대체인력 지원 최대 1440만원
복귀 지원 비율 폐지로 실질 강화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할 경우,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신청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지난해 건설업 매출 500조 '역대 최대'

통계청, '건설업 조사' 전년比 9.9%↑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실제 공사는 기업 매출액에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실적 부진이 내년과 후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9%(4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4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단, 증가율은 지난해(+12.4%)보다 둔화했다.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수주 계약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대비 10%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며 "건설비용도 증가했고 그에 따른 건설 단가의 상승분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 매출액은 328조8000억 원으로 12.4%(3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177조9000억 원으로 5.6%(9조5000억 원) 늘었다.

매출액뿐 아니라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부가가치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기업체 수는 8만7891개로 전년 대비 0.7%(652개)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81만 명으로 전년보다 4.0%(7만 명) 늘었다.

직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 종사자수는 63만6000명으로 3.7%(2만3000명) 증가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117만5000명으로 4.2%(4만8000명) 증가했다. 건설비용은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50조6000억 원) 늘었다.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15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5조원) 증가했다.

건설업 기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각각 58억 원, 2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03조4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0.1%를 차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글로벌 디지털 통상 대응전략 마련

산업부,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주요국의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양도 과정 완화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게 동일한 양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양도 제한 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지역별로 요구되는 양수자의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축소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자뿐 아니라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자의 범죄경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해외서 녹색산업 기술력 인정 수주·수출 22조7000억 달성

환경부, 전략회의·재정지원 지원 약속
기술 고도화·해외 진출 다변화 등 성과
사우디·브라질 등 수주 사례 돋보여

환경부는 올해 국내 기업이 22조7000억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966억원 대비 약 2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기업들이 녹색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꾸준한 성과를 이어간 결과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원의 수주 및 투자 성과를 거뒀으며, 602개 기업이 참여한 녹색제품 수출은 6조169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니마) 등이 있다.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한 결과다.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73개)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며 1대 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와 협력하며 녹색산업의 수주·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수주·수출 지원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 발굴부터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참여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정부 관심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디지털 기술로 농어촌 활력 높인다

농어촌공사-네이버, 기후위기 대응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가 '농어촌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 성남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가 지난 16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농어촌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